



갑자기 내린 장맛비에 발걸음 재촉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맛비가 내린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중단’ 광주상생카드 10월 재개

“100→50만원 한도 낮춰”... 전면무상보육 공약 ‘불가능’

민선 7기 광주시가 추진하거나 공약했던 광주상생카드나 전면무상보육 정책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민선 8기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가 29일 시의회 5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선7기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하 인수위원장(광주과학기술원 원고수)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9월 중단됐다”면서 “2019년 600억원, 2020년 6000억원, 2021년도 1조원, 올해 추정상 1조 4000억원 정도의 카드 사용이 예측됐는데, 민선 7기 시비와 국비가 조기 소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광주상생카드를) 비효율적인 투자로 판단해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민선 8기 광주 상생카드를 없앴다는 오명은 오히려 있는 것

이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카드한도를 낮춰 10월 10일 재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광주상생카드) 계속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혜택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현재 카드 2개당 한도 100만원을 50만 원 정도로 줄이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10월 상생카드를 재개하는 방안을 시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7기 공약인 0~5세 무상교육 전면시행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영아 0세에서 2세, 유아 3세에서 5세, 총 3만명 정도에 게 필요한 예산은 연간 322억 정도에 추경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를 시장에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면서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신설 과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거처야 하지만, 사전 협의에 해당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표와 보도를 했다”고 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도철 2호선 3년 이상 지연 불가피

1단계 2023→2026년...2단계 5년 지체·3단계 불투명 “市, 2019·2021년 공사지연 인지하고도 알리지 않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개통이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최소 3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파장을 우려,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쉬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 격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29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 자문회의를 열고 민선7기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회는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광주시청~광주역, 17km)은 “공기내 완공이 불가능하다”면서 “빠르면 2026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결론내렸다.

광주역~침단~시청에 이르는 2단계 20km 구간도 당초 2026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5년 정도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2029년에야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인수위는 관측했다.

나머지 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 4.8km)는 예상 공사비가 2200억원에 이르지만 5억원만 남아 있어 “사실상 공사 추진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인수위는 사업 지연이나 착공 불가능도 문제지만 이같은 사실을 광

주시가 이미 인지했음에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2호선 1, 2단계 공사가 각각 3년, 3년 가량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주처인) 광주시가 2019년 6월 조달청 공사계약 의뢰 과정, 2021년 5월 기획재정부와의 총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모두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단계 지연의 경우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54개월로 연장되고 2025년까지 다른 공사를 추가하고, 모의주행까지 포함하면 이미 2019년도에 2026년까지 밀릴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는) 2019년 9월 착공식 당시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언했다. 2단계도 수 년 간 늦어지고, 3단계

는 아예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고도 “추후 복원하겠다”는 전제로 지난 1월에는 광주시장 결재까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측은 자문위 내부 논의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마무리 협의 등을 거친 뒤 7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업 지연은 인건비 등 물가상승과 안전규정 강화로 인한 추가 시설비, 지장물 발견과 설계 변경 등으로 수 천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2호선 예상사업비는 당초 2조 1761억원보다 8000억원 이상 증가한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가 60%고, 나머지 40%는 매정사업비로 광주시가 마련해야 할 재원이어서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범 기자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인하

건보료 月3만6000원↓...부수입 많은 직장인 月5만원↑

오는 9월부터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만1000원 인상된다. 2000만원 이상 수익이 있는 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를 내야 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며, 40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گی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

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기본 재산공제액은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권형안 기자

광주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	2면
물가 6%시 빅스텝 나설 듯	4면
실종 초등생 일가족 주검 확인	9면

저작권 침해 NO! 틈새없는 저작권 서비스 YES!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과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문의

전화 : 061-280-7493
 이메일 : pjy@jcia.or.kr

신청

QR코드를 스캔해
 신청 바로가기!
www.copyright.or.kr